

# “한전 본사 나주 이전 예정대로”

## 정중환 장관 “혁신도시 재검토 없다...차질없는 추진에 최선”

### ‘혁신도시 의원 모임’ 간담회서 밝혀

정부는 1일 혁신도시 사업의 백지화와 축소 변경은 검토한 바 없으며 한전 본사도 민영화와는 상충에서 예정대로 나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혁신도시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혁신도시 추진계획의 변경이나 축소가 있느냐”는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백지화나 축소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계획대로 가되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문제점을 짚고 발전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계획의 보완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혁신도시도 중요하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들을 묶어서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도시별로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실무자들을 진행 중인데 가능한 빨리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며 6월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국토해양부와 상의해 혁신도시의 발전적 보완계획(안)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 차관은 특히 “공공성이 강한 원자력발전 등 국가에너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정책토론회’에서 최인기 추진의원모임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여야 의원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공급의 중심기관인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최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가기관 설립한 한전 본사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전력 본사는 예정대로 나주로 이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자회사 민영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인해 혁신도시에 이전될 공공기관의 수가 축소되지 않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중 주로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기관들은 관계가 적을 것이다”며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민영화 가능하다

지, 공기업 민영화 시 지방이전이 안 될 경우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도시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명칭을 ‘혁신도시 건설 추진 국회의원 모임’으로 바꾸고 국회에 정식연구단체로 등록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기반시설지원금에 예산에 반영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4명의 회원 중 최인기·김재경·김재운·김정훈·서병수·유승민·이계진·정갑윤·최구식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52개 생필품 물가관리 말로만 하나”

## 李대통령, 靑 비서진 질타 적극 대처 주문

### 기획재정부, 오늘 고강도 물가대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민생활과 직결된 52개 생필품의 물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생필품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일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에 대비 ‘4.0%±0.1% 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목표치(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음주로 예정됐던 서민생활안정태스크포스(TF)회의를 2일로 앞당겨 개최, 고강도 물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원비와 라면, 소주, 배추, 마늘, 소·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생필품을 이른바 ‘MB품목’으로 지정, 특별관리를 주문했는데도 이들 품목 중 일부의 가격이 안정되지는 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2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를 관리한다고 해 놓고 실제

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실무 비서관들을 질타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신문을 보니까 김마늘이 40 몇% 올랐다고 돼 있는데 김마늘 왜 올랐는지, 수입을 해서 풀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물가를 관리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서 되느냐. 그냥 한다고 얘기만 하고 관리는 안하느냐”고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안 챙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청와대가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챙겨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마늘값 오른 것 하나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신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질타에 김중수 경제수석은 “제가 직접 챙겨야 되는 사안인데”라며 당황해 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현재 52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운하, 각 단계마다 여론 수렴해 추진”

## 이동관 靑 대변인 “민자 진행 방식 변함없어”

청와대는 1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논란과 관련, 필요할 경우 각 단계마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대운하 문제가 타당성을 둘러싸고 객관적, 이성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운하를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자들은 무조건 찬성하고, 반대론자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적 논란으로 변했다”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단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변함없다.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타당성, 적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단계마다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추진)

하겠다는 기본방침”이라며 “흔란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론수렴 후 추진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대운하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여권 내부에서조차 대운하 보류설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수렴 후 민자 추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청와대 내에서도 이런 저런 논란들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사적 의견들은) 청와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다”면서 “지금 밝힌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박미석 사표 수리...“가능하면 여성” 후임 물색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부동산 투기 및 서류조작 의혹을 받아 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고 후임자 선정에 나선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사표가 오늘 중 수리될 것”이라며 “후임인사로 10여 명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박 수석이 여성 수석이었던 만큼 가능하다면 여성 후보를 고려하고 있지만 인재풀이 넓지 않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차라리 ‘수도권 발전위’라 불러라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이명박 정부는 결국 지방을 버릴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나타난 우려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혁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할 태세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지방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믿어야 할지가 의문이다. 그나마 갖고 있던 일발의 희망은 지난달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대표적 수도권 발전론자인 최상철(68)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최 명예교수는 지난 2004년 ‘수도권발전위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경기 선진화 위원장’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오기의 대못질을 멈춰라’는 한 신문 칼럼에서 “수도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지방으로 나누어 주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평등주의 도착증(倒錯症)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최 명예교수를 “수도권의 기득

권 사수에 골몰하는 ‘수도권 지역이기주의’의 화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당시 수도권 이전에 반대했던 것은 실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체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다”며 “균형발전에 반대하지 않지만 과거와 같은 균형발전은 국가에도, 지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명예교수의 내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쉬 사그라지지 않을 조짐이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지난 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약 내정 철회 주장을 무시한다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의지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언하는 것”이라며 “지방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등 3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수도권 파밀반대 전국연대도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면, 이번 최 위원장의 내정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지식인의 가치관을 두고 쓸데없는 인격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 명예교수의 가치관과 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옷’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 명예교수의 내정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아예 ‘수도권발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나을 듯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 명예교수가 최소한 당시 학자로서 가진 (행정수도 반대) 소신이 잘못됐었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jkpark@kwangju.co.kr